

## 연구가 강의를 이끌어야 한다

조 동 일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나의 공개구직과 함께 제기된 문제를 『대학교육』에서 지상토론으로 다루는 데 대해서 감사한다. 논평을 하고 의견을 개진한 장일조, 서경호, 이상섭, 임재해 네 분의 글을 읽고, 상당한 공감의 형성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공개구직이라는 방법은 특이하지만, 그 기회에 부각된 문제는 학계 전체가 공동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고, 상당한 범위의 정책적 결단이나 제도 개선을 거쳐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접근되어 다행스럽다.

그렇지만 서경호 교수는 다소 유보적이고 회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현행 제도를 잘 활용하면 연구와 강의를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잘못 전달되었거나, 설명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의심되어, 추가 논의를 하는데 필요한 교훈으로 삼기로 한다.

이번에는 원칙론을 떠나서, 구체적인 사항부터 거론하기로 한다. 나는 지금 “우리 말로 철학하기, 그 선례와 진로”라고 제목을 정한 과제를 두고 연구하면서 저서의 일부가 되는 글을 쓰고 있다. 그것은 내가 구상하고 있는 세계문학사의 이론 정립의 아주 요긴한 작업이고, 문학·철학·역사를 아우르는 작업의 본보기이다. 장일조 교수가 말한 ‘학문이론적 자각’을 거쳐 만들어내는 ‘세계관적 학문’의 기초공사이다.

어느 문명권에서든 중세는 물론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까지는 라틴어, 산스크리트, 한문 등의 공동문어를 사용해 철학을 하다가 근대에 이르면 자기 말로 철학을 하는 전환을 겪었다는 사실을 들어, 세계문학사·세계철학사·세계사를 한꺼번에 이해하는 총괄이론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동문어에서 민족어로의 전환은 문학사에서 다루어

야 하는 기본 과제이다. 그렇게 하는 데 철학의 저술을 예증으로 삼아 철학연구에 기여한다. 유럽의 충격 때문에 다른 문명권의 근대화가 어떻게 왜곡되었는가 살피는 작업을 하면서 역사연구에 참여한다. 그 세 작업을 하나로 관통시키고자 한다.

먼저 유럽 문명권, 특히 독일에서 그런 전환을 어떻게 이룩했는가 살핀 다음에, 유럽 문명권의 도전을 받은 다른 문명권의 중국·인도·일본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찾았는가 비교해서 논하고, 한국의 경우를 문제삼는 것이 전체적인 구상이다. 중국에서는 '자기 말로 자기 철학하기'를, 인도에서는 '남의 말로 자기 철학하기'를, 일본에서는 '자기말로 남의 철학하기'를 한 것이 서로 대조적임을 밝히고 그 득실을 논한 다음에, 한국의 상황을 거기 비추어 분석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고자 한다. 우리말로 우리 철학을 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가 밝혀, 다른 여러 학문에서 널리 받아들일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에서는 한문으로 하던 철학을 백화(白話)로 풀이하니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두 말은 거리가 거의 없어 고전 재해석의 고민이 배제되고 있다. 인도에서는 자기네의 산스크리트 철학을 '남의 말'인 영어를 이용해서 풀이하고, 일본에서는 '남의 철학'인 유럽 철학을 일본어로 이식하는 데 힘쓰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밝혀 논한다. 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국의 풍우란(馮友蘭), 인도의 라다크리슈난(Radhakrishnan), 일본의 니시다기따로(西田幾多郎), 한국의 박종홍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특히 용어 사용과 글쓰기 방식 분석에 힘쓴다.

이런 연구를 하는 데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국문학 교수가 이런 연구를 해도 되는가? 이런 연구의 내용을 국문학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에서 강의할 수 있는가? 이런 연구에 소용되는 도서를 도서관에 갖추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허용해 달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연구를 하는 데 연구비가 있어야 한다고 해도 되는가? 이런 연구를 해서 책이나 쓰면서 전공 분야 학회지에다 규격화된 논문을 발표하지 않아도 되는가? 많은 자료를 펼쳐놓고 이런 연구를 하려면 넓은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도 되는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지금의 제도는 모두 다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한다. 국문학 교수에게 주어진 강의를 충실하게 하는 여가에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본분을 버리고 일탈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상섭 교수가 말했듯이, 이런 연구를 '과외활동'으로 해야 하니, 너무 억울하다. 일이 너무 많아 여가 시간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건강이 상할 수밖에 없다. 머슴살이를 하는 여가에 자기 농사를 지으라는 주문이 너무나도 가혹하다.

그래서 나는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노릇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에는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는 탓에 다른 학과나 다른 대학의 교수로 자리를 옮기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과나 대학을 신설해서 맡는다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현행 제도 속의 교수 자리를 거부해야 대책이 생긴다.

교수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교수는 지식의 전달자나 가공자에 머

무르지 않고, 이론의 생산자일 수 있어야 한다. 연구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가 범위를 정해두지 말고, 연구를 하는 데 필요한 도서, 시간, 작업 공간을 넉넉하게 주고, 연구 결과를 스스로 개설하는 공개강의를 통해서 발표하고 점검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드는 일은 아니다.

전국의 교수가 일제히 다 그렇게 하자라는 것은 아니니 안심할 일이다. 짐을 많이 지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임재해 교수가 말한 바와 같이, 형평에 어긋난 일이 아니다. 이런 주제의 연구가 여기 저기서 이루어져서 전작 저서로 출판되어야 우리 학문이 선진화하고, 선진국이 되겠다는 꿈이 실현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나라의 학문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생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오늘날까지 전쟁의 참화를 겪고,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진통이 너무 많아 학문 정책을 바르게 할 겨를이 없었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른 주권국가라면 어디서나 위에서 요구한 사항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더라도, 제도의 채택 여부는 새삼스럽게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

한 가지 사실만 들어 그 점을 분명하게 하자. 강의하는 교수와 연구하는 교수를 병립시키는 제도를 동아시아 우리 주변의 모든 나라, 일본·중국·대만·북한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만은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라를 만들다 말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 북한은 소련의 전례를 따라서 과학원과 사회과학원

을 창설했지만, 남한에서 받아들인 미국의 제도에는 연구하는 교수가 어느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아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차질이 생긴 이유일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설계하는 안목을 가지고, 미완성의 과제를 완성해야 한다.

한국에도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강의를 본분으로 하는 교수보다 지위가 낮고, 보수가 박하며, 신분 보장이 불안정하고, 행정기관의 간섭에 더 많이 시달린다. 정부에서 가장 힘들여 육성하는 기술과학의 분야라도 그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상섭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연구기관이 교육기관이 되고자 하는 것을 지금의 형편으로서는 막을 수 없다. 연구원 노릇에서 벗어나서 강의하는 교수가 되어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으므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연구소를 다시 세워도 그렇게 되고 만다.

안동에다 국학연구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대학에 가서 강의하는 교수가 되고자 하는 후보자들이 그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관료조직의 말단에 배치된 연구원들이 연구행정을 보조하는 업무에나 종사하고 말지 않을까 염려된다. 강의 때문에 연구할 겨를이 없는 외부의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나누어주는 기관을 만들어 연구를 진흥하려고 하는 착각을 이번에는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연구 제목을 정해주고 돈을 몇 푼 건네면, 정해진 기일 안에 주문한 대로 원고지를 메워 내는 글이 연구업적이라고 하는 잘못을 언제 시정할지 아득하다. 대학의 부설 연구소도 하나 예외 없이 학문의 생산공장

이 아니고, 거래시장이다. 교수들이 강의를 하는 여가에 각자 조금씩 하는 연구를 모아다가 이문을 남기고 파는 장사술은 나날이 발달하고 있다. 대학 안의 학상배(學商輩)가 정부를 설득해서 기존의 연구소를 통폐합한다든가 새로운 기관을 설립한다든가 하는 등의 책동을 부리는 일이 전보다 부쩍 많아졌다. 정부가 연구를 위해서 극소액의 예산이라도 쓰기 시작하자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강의는 신성하고 연구는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제 연구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이다. 연구는 처세와 돈벌이의 수단이 아님을 밝혀, 학상배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연구와 강의의 관계에서는 연구가 강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연구의 진행과 더불어 강의가 새로워지고, 연구 결과에 의해 학문의 새로운 영역을 열어야 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연구를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해내서 학문의 공동 영역을 확보하지 않고서 인문학부를 만드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사기극이다. 명문 대학에 유학했으면 명교수이고, 첨단 유행사조를 수입하면 학계를 이끌 수 있다는 착각을 깨는 유일한 대책은 우리가 보편적인 이론을 생산하는 학문을 최대한 평가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연구가 강의를 이끌어 나가야 세계적인 이론을 우리가 만들어 대학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민족통일을 설계하고, 통일 후의 사회를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학문을 선진화하지 못하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대신에 후진국으로 추락한다. 중진국으로 남아 있는 것은 주변의 여러 나라

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과 후진국 가운데 어느 나라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가 강의를 이끌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강의 부담이 과중하고, 개설과목이 고정되어 있고, 도서관이 텅 비어 있고, 연구비 지급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등의 장애요인이 겹겹으로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장애요인 제거는 각자의 의식전환으로 가능할 일도,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도, 대학 개혁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도 아니다. 이중 삼중의 피해자인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매질하기만 해서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따름이다.

강의를 이끌어 나가는 연구를 하는 것 자체는 학자의 임무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어놓은 것을 풀어주는 일은 묶은 쪽에서 해야 한다. 누가 그렇게 했는가 따져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할 일은 아니다. 오직 다음 대통령이 역사적인 결단을 내려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지금은 묶은 것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뜻 있는 교수들이 일제히 나서서 외쳐야 할 때이다. 외치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으니, 바람직한 연구의 모형을 보여주는 일을 소홀하게 할 수 없다. 불가능한 조건에서 가능한 일을 해야 하니, 아무리 힘겨워도 분투해야 한다. ♣

---

조동일/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계명대, 영남대, 한국정신문화연구소의 교수를 지내고 현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한국문화통사』, 『동아시아문화사비교론』, 『우리 학문의 길』, 『세계문화사의 허실』 외 30여 권을 발표하였다.